

동아시아 문명담론 사용법

1. 문명담론의 재발견

코로나19 사태는 문명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기를 촉구한다. 이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근시안적인 동-서 구분법(myopic east-west thinking)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¹⁾ 바이러스가 폭로한 구미문명의 혼란에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동시에 구미의 대응책과 대비되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권 침해나 국가통제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되면서 이것이 유교문화의 집단주의나 질서중시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는 문화주의적 해석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응과정에서 불거진 문명(또는 문화)에 대한 논란보다 더 근원적인 영향은 코로나19로 조성된 팬데믹 사태로 기후와 생태 위기에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 이어) 또 한번의 문명대전환기를 맞은 실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 사태 이전부터 문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문명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발표자는 양국의 문명담론 3종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 내용은 문명담론이란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영역에 걸치지만, 여기서는 개인수양과 사회개혁의 관계란 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것이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 18세기 유럽의 담론지형에서 보수파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거나 적어도 각 개인의 자기완성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진보파는 그런 주장이 불공정한 구제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개개인의 변화가 사회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구도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100년의 변혁을 거처온 동아시아에서는 이와 달리 개인수양과 사회개혁의 병진을 주장한 문명담론이 형성되어 (크든적든) 영향을 미쳤다.

2. 중국 ‘신시기’ ‘문명형국가’론

첫 번째로 다룬 문명담론은 장웨이웨이(張維爲)가 제기한 ‘문명형국가’이다.²⁾

우리는 오래 동안 중국 국민국가의 형성을 설명할 때 ‘문명(또는 천하)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발전적 역사경로로 보는 근대주의적 역사인식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발신해 점차 밖으로도 확산되는 시각은 중국을 ‘제국이자 국민국가’로 파악하는 일종의 탈근대적 인식이다. 사실 세계의 여러 문명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 현존하는 사례가 중국이기에 설득력있게 들린다.

이러한 조류의 하나가 ‘문명형국가’(civilizational state)라는 개념이다. 그 뜻은 민족국가(nation-state)와 문명국가(civilization-state)가 융합된 것이고, “민족국가와 문명국가의 장점

1) Andrew Liu, ““Chinese Virus”, World Market”, *n+1*, (March 20, 2020). <https://nplusonemag.com/online-only/online-only/chinese-virus-world-market> [2020년 8월 1일 검색]

2) 장웨이웨이(성균중국어연구소 옮김), 『중국은 문명형 국가다』, 지식공작소, 2018. 이하 서술에서 직접 인용의 경우만 본문에 면수를 표시했다.

이 결합된 국가”를 말한다.(7, 19면) 종래 서구학자들이 제기한 문명국가 개념은 민족국가 형성 이전의 문명 형태의 국가를 가리켰고 문명과 국가가 종종 모순된 것으로 근 파악한다.(19면) 이에 비해 5,000년 동안 이어온 문명과 초대형 근대국가가 중첩된 나라인 중국만이 발전할 수 있는 독특한 개념으로 ‘문명형 국가’가 제출되었고, “이는 서구의 중국에 대한 주류 담론을 해체하고 중국인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문화적 자신감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부된다.(6면)

그 특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초대형 인구 규모, 광활한 국토, 긴 역사전통 및 풍부한 문화자산이라는 네 가지이다. 여기까지는 간양(甘陽)이나 마틴 자크(Martin Jacques) 등이 등이 말하는 문명국가론과 별 차이 없다.³⁾ 그런데 그는 그 제도적 표현체에 대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즉 정당제도에서 국가형 정당 혹은 총체적 이익정당(整體利益黨), 조직제도에서 현능주의(賢能主義, meritocracy), 경제제도에서 혼합경제로 구체화된다. 이 발표에서 이에 대해 길게 소개할 겨를이 없어 미뤄두는 대신에, 이 개념을 제기한 중요한 목적만 언급하겠다. 그것은 현재 국가의 정치적 합법성을 구미의 국가에 대비하며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점을 압축적으로 말하면 중국모델의 높은 경쟁력이다.

그렇다면 중국모델의 핵심적 특성은 무엇일까. 조직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 나라의 조직화는 조직 능력, 종합능력, 계획능력을 포함하는데, “지난 30년의 상황을 보면 중국모델은 대내외적으로 각기 다른 이익을 조정해 재통합했다는 점에서 서구모델보다 우수”(230면)하다고 주장된다.

이 중국모델론은 천명관을 매개해 문명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천명은 일종의 중국적 계약론인 셈이다. 그것은 민심의 向背이자 황제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으로서 민본사상과 연결되고, 현능주의(選賢任能)를 구현한 과거제도와 이어진다. 한 마디로 중국모델의 경쟁력의 핵심은 현능주의와 민심의 향방이 결합한 치국이념이다.

여기에서 서구의 ‘과정의 민주’와 다른 중국의 ‘실질적 민주’를 옹호하는 근거가 제시된다. 그것은 “어떻게 최대한도로 인민의 바람과 요구를 반영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진정으로 좋은 정치와 선한 통치(良政善治)를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162면) 사상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화문명에서 장기적 계획이라는 정치적 지혜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165면)

장웨이웨이이는 중국모델이 법치와 덕치를 병행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덕치는 인간 내면에서 생성되며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규범화한다는 점에서 사회관리의 가장 높은 경지이므로, 사회관리의 측면에서 ‘덕치’가 ‘상책(上策)’이고 법치가 ‘하책(下策)’인데, 상책과 하책의 결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책과 하책이 결합한 사회야말로 “관리 비용이 더욱 낮고 더욱 공정하며 더욱 자연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236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문명형국가 담론이 국가 위주의 발전전략임이 뚜렷하다. 여기서 개인의 역할은 기능적인 면에 치중된다.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에서 출발해 경중과 완급을 조절하는 발전 전략에 맞춰 개인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채택되기 때문이다. “조직화에 개인의 적극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조직화를 통해 먼저 질서를 확립해야 개인의 생활이 더욱 향상한다.”는 대목에서 그 특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229면)

그렇다면 100년 변혁 시기 중국에서는 개인과 혁명의 관계의 장력(張力)을 민감하게 다룬 담론이 없었는가. 여기에서 또다른 문명담론인 혁명수양론의 계보의 세 단계로 관심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

3) 졸저,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본다』, 창비, 2013, 295-299면.

3. 중국에서의 혁명수양론의 계보

3-1 1920년대 중국 청년학생의 혁명인생관

5·4운동이 퇴조하던 시기에 베이징대학 맑스주의연구회(馬克思學說研究會) 안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혁명인생관이 대두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⁴⁾ 일개 학생이 노동혁명운동에 투신한다는 것은 학업을 떠나 '직업혁명가'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혁명실천의 문제이자 '혁명인생관'을 확립하는 문제였다. 중국공산당은 연구회 안에서 이에 대해 되풀이해 토론을 벌여 맑스주의이론이 제시하는 혁명적 전망을 받아들여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연구회 구성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청년단원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과제였을 것이다. 신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소단체에서 강조된 개인의 수양이 (아나키즘의 영향 속에)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 향상을 강조하던 것에 비하면 개인을 동원해 국가와 혁명에 투신하도록 하는 혁명적 수양으로 전환된 것이다.⁵⁾

'주의(主義)의 시대' 또는 '조직의 시대'라 훗날 일컬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새로 탄생한 '직업혁명가'들이 (발표자가 강조하는) 일반 학생들의 '사회변혁지향'과 만날 때 혁명운동은 활동성 있는 주체를 확산할 수 있었다. 이제 5·4운동이 국민혁명으로 전화(轉化)·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⁶⁾

국민혁명에 참여해 직업혁명가의 길을 '걸을 만한 인생의 길'(혁명인생관)로 선택한 청년들의 공통점은 더이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노동대중과의 일체감을 느끼도록 애쓰는 자세이다. 다음과 같은 보고는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다수의 동지는 평소 학생생활에 익숙해 있어 일단 노동자가 되어 그들의 고달픈 생활을 겪게 되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경험이 늘면 늘수록 육체는 비록 고달프나 정신은 오히려 유쾌해진다! 평상시 책 속에서 구하던 학문은 종종 건조하고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운동에 참가하면 책 속의 학문과 실체가 상호 대조된다.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 노동상황이 모두 실상이 아니었다. 만약 절실히 알기를 원한다면 운동에 참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⁷⁾

3-2 건국 초 중국공산당의 혁명수양론과 군중노선

1949년 중공이 도시를 접수·관리(接管)하는 데 성공한 비결은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면서 기층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 목표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라든가 저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헌신적인 간부들”이 중요했다.⁸⁾

그런데 간부 개인과 혁명의 관계를 묻는 윤리문제가 건국 초기 중공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즉 군사적으로 승리해 베이징에 들어와 '전리품'을 접수·관리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4) 이 부분은 「羅章龍談中國勞動組合書記部北方分會」, 中國革命博物館編, 『北方地區工人運動資料選編 1921-1923』(北京: 北京出版社, 1981), 6-8면에 의존했다.

5) 森川裕貴, 「从日本の現状和中国近現代の修身問題来看《道路》一书的定位」(미발표원고)

6) 鍾啓『中國現代大學文化研究: 正體性危機와 社會變革』, 一潮閣, 1994, 제2부 참조.

7) 「團上海地委農工部給團中央農工部的報告」, 『檔案與歷史』 1986-4.

8) 윤형진, 「역사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도시 기층조직: 거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16년 겨울호, 352면.

사태에 직면했다. 그래서 승리자가 어떻게 다시 사회기반을 개조함으로써 자신을 개조할 것인가를 문제삼은 것이다. 간부의 주체적 개조와 공작태도의 조정을 통해 조직메커니즘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다시 간부의 주체의식을 교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출되었다. 요컨대 지도자가 어떻게 민중과 한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실제로 ‘개인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해도 도시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문제에 부닥쳐 개인과 혁명관계의 윤리토론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보통은 “엄격한 조직생활, 전체 당원대회, 조사, 민주” 등의 조직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 교정 및 인도가 시행되었다. 이같은 실천경험이 반복되면서 건국 초기 혁명 분위기가 일정 정도 유지되었다고 한다.⁹⁾

사실 이 주제의 중요성을 옌안(延安)시기에 이미 간파한 것이 류샤오치(劉少奇)의 『공산당원의 수양을 논함』(1939년)이다.¹⁰⁾ 물론 중국 공산주의 운동 초창기부터 지식인의 도덕적 엄격주의가 입당의 중요한 동기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당시 지식인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전통문명(특히 유학)의 수양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당원 개인의 도덕적 성찰의식을 높이고 인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각자의 당성(黨性)수양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개인개조(내지 수양)를 사회개조에 종속적으로 보던 당내 풍조와 달리 그는 개인개조를 강조하면서 양자의 병진을 당원수양의 이론적 근거로 삼은 점에서 독창성이 드러난다.

여기서 혁명적 수양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군중의 감정동원 문제와 군중노선으로 관심을 옮겨보겠다. 이는 군중 개개인의 수양과도 관련이 있다.

국공 양당의 정치담론과 조직구조가 ---당국체제가 그 대표적인 공통 특징이다---상당 부분 같으나, 중요한 차이는 중국인민의 감정을 환기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농촌의 토지개혁이나 도시의 군중운동에서 자주 구사된 ‘감정 고양’(emotion raising)은 중공이 혁명과 건국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¹¹⁾ 그런데 감정공작의 내재적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론상으로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나, 실제에서는 종종 소란을 발생케 했다. 법치와 인권 무시가 폐단으로 곧잘 지적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이 지적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 그 복합성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오늘날 널리 관심사로 떠오른 정동(affect)의 시각에서 다시 보자. 정서(emotion)나 감정(feeling)과 관련된 몸(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정동은 신체와 정신,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들을 가로지름으로써 세계를 계속적으로 변형시키는 힘으로 이해된다. 이 변형력이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유와 정동이 본질적으로 대립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여기서 “정동이 이미 내재된 사유”를 통해 “어떤 상투성에 얽매지 않으면서 정동의 아나키즘”을 극복할 길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¹²⁾

과연 혁명과 건국 과정에서 동원된 ‘감정 고양’이 이 수준에 도달했을까. 이와 관련해 군중운동과 구별되는 군중노선을 강조하는 허자오펜(賀照田)의 주장은 시사적이다. 중공의 공식해석에 따르면, 군중노선은 모든 것이 “군중으로부터 나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정치

9) 何浩, 「接管天下:北京市城市接管적歷史實踐及其思想意涵」, 『人間思想』, 제3집, 臺北:人間出版社, 2015, 9, 11, 12면.

10) 이 판본은 1939년판, 1949년판, 그리고 1962년과 1980년판의 4종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任晓伟, 「《论共产党员的修养》历史生成、版本演变和现实意义」, 『学习月刊』, 2017년 2기 참조. 이하 서술은 吴增礼, 李亚芹, 「儒家思想与刘少奇马克思主义中国化的文化进路: 以《论共产党员的修养》为讨论中心」,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9년 3기 참조.

11) (美)裴宜理(Elizabeth Perry), 「重访中国革命: 以情感的模式」, 『中国学术』, 2001년 제4기, 5면.

12) 한기욱, 「사유·정동·리얼리즘」, 『창작과비평』, 2019년 겨울호, 34면.

노선이자 조직노선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는 군중노선을 그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참여자의 “공화욕구와 공화능력”이 배양되고 “좀더 나은 정신·심신상태와 좀더 충만한 생활양태”를 양성하는지 주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군중노선이 연결하는 것은 영도자·조직자·엘리트와 군중만이 아니라 일과 심신, 개인과 공공 그리고 현재와 인민공화가 진정으로 실현하는 중국미래이다.”라고까지 적극 평가한다.¹³⁾

그가 ‘공화’를 언급한 대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공화주의는 국가 사무와 정치를 군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사무로 간주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의 도덕(公德)을 중시한다. 여기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의 도덕이란 “진리의 길로서의 도(道)와 도에서 나오는 힘으로서의 덕(德)”이어야 함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¹⁴⁾ 군중운동이 과연 이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 허자오텐이 군중운동과 구별되는 군중노선을 강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터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인민대중이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수반하지 않은 채 제도개혁을 통해서만 혁명을 이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묻는 시각에서 군중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화주의에서 도덕의 물질 기초인 개인의 독립적 생계도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점도 중요하다.¹⁵⁾ 이 점이 중국인의 경험에서 드러난 사례를 들어보자. 건국 초기 동북지방의 류빈(劉斌)이 공장 접수 후의 일상생활에서 연안 시기 군중노선 등 혁명경험에 근거해 노동자와 더불어 생활하며 전통적 윤리관념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同甘共苦) 감정을 활용했다. 이것을 감정과 윤리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점차 접수·관리를 수행한 간부와 일반노동자 사이에 공화이념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항미운동에서 군중을 동원할 때 단순히 전면적 선전에만 의존하게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노동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개별방문과 좌담 등을 통해 노동자의 주택, 자녀교육, 가정부담 등의 문제에 섬세하게 접근했다. 허하오(何浩)는 이로부터 재산과 권력의 재분배를 피부로 느끼는 군중이 그것을 지킬겠다는 동기와 애국이라는 공공의 동기를 결합한 사례를 찾아낸다. 달리 말하면 맹자(孟子)가 일찍이 강조한바 향산(恒産)과 향심(恒心)이 상호작용하는 사회구조에 착목한 것이다.¹⁶⁾ 요컨대 개인윤리(내지 수양) 문제가 추상적 차원이 아닌 일상생활의 실감 문제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길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의 혁명인생관 내지 혁명수양론에 내재된 자발성과 위계성의 긴장이란 문제는 창당 초기부터 있었고, 군중운동과 군중노선 안에 줄곧 存續했음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

3-3. 신혁명사, 혁명의 문명사적 함의 재발견

지금 중국에서 ‘신혁명사’가 조용히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G2로 부상한 중국의 성취를 이룩한 주체인 중국공산당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혁명사 연구가 학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실에 대응하려는 노력이지 싶다.¹⁷⁾

그 조류에서 전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중국의 특수성이 오히려 성공의 비결로 재인식된

13) 賀照田, 「群衆路線의浮沉」, 『革命-後革命:中國崛起的歷史思想文化省思』, 新竹:國立交通大學出版社, 2020, 164면.

14) 백낙청 지음(박윤철 엮음),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모시는 사람들, 2016, 215면.

15) 유용태,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2017, 284면.

16) 何浩, 「“馬恒廠小組”:以工人階級建國的歷史實踐及其思想意涵」, 賀照田·高士明主編, 『人間思想』, 제 1집, 北京:金城出版社, 2014, 81-82면

17) 유용태, 「'G2중국'의 혁명사 연구: 국제학술회의 참가기」, 『중국근현대사연구』 76집, 2017

다. 위에서 본 문명형국가 담론이 그렇듯이, 중국 학계에서 ‘문명’을 중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역량의 바탕으로 드높이는 담론이 성행중이다. 당국체제에 대해서도 서구형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간주되고 문명적 설명이 가해진다. 예컨대 일당제는 유가 사대부의 일원(一元)정치에 기원하고, 송·명대 이학(理學)의 보편적인 원리와 개별적인 원리 사이에 일치성이 있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로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다는 식이다.¹⁸⁾ 말하자면 혁명의 문명사적 함의에 주목하는 경향이다.

그중 이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 발표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개인 내면의 심성’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우충칭(吳重慶)은 한국에서 제기된 ‘사회적 영성’ 개념에 촉발되어 유학전통과 혁명전통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다. 즉 유학의 내성외왕(內聖外王) 개념 속에 이미 ‘사회적 영성’의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중국사회의 변혁을 추동하는 힘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에 내재된 초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총체적인 사회변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⁹⁾ 또한 조직된 균중인 인민이 정치주체가 되는 ‘인민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사회적 영성’을 매개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했으나, 기존의 혁명수양론의 구도에 머문 느낌이다. 이래서는 혁명수양론에 내재된 자발성과 위계성 사이의 긴장이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efficacy)을 이끌어내기에는 더더욱 미흡하다.

개인수양 과정에서 변화된 새로운 자아가 (지구적 규모로 위력을 떨치는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곧 사회적 영성)을 집단적으로 회복하여 ‘개인들이 힘 있는 주체가 되고 세력화된 민주주의’ 곧 한층 래디컬한 ‘강화된 민주주의’(empowered democracy)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²⁰⁾ 달리 말하면 민주적 집단의 주체성과 연대의 기제를 표현할 좀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이념적·제도적 실험을 과감하게 해볼 만한다.

4. 한반도의 개혁 사상과 운동

조선왕조 말기부터 출현한 한국 근대 신종교의 개혁담론이 최근 대안적 문명의 가능성으로 서서히 퍼지고 있다. 특히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운동에 미친 영향이 관심을 끌었다.

한자어권에서 개혁은 ‘천지개벽’(天地開闢)의 뜻으로 흔히 이해되지만, (동학과 그 후신인) 천도교·증산교(曾山敎)·원불교(圓佛敎) 등 신종교가 하나같이 내세운 슬로건인 개혁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타자 구제를 실천하여 ‘새로운 문명을 열자’고 하는”²¹⁾ 사상이요 운동이다. 그것은 우주론적 전환 의식과 동시에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역사적 전환 의식이 동시에 반영된 개념이다. 이것이 구한말 개화(開化)나 위정척사(衛正斥邪)와 다른 ‘토착적 근대’ 또는 ‘한국적 근대’의 노선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²²⁾

18) 謝茂松 : 「从文明的视野理解中国共产党一党执政」 『开放时代』 2018年 第1期; 李放春, 「毛澤東“理一分殊”思想發微」, 『开放时代』 2018年 第3期.

19) 吳重慶, 「迈向社会革命视野下的革命史研究」 《中共党史研究》 2019年 第11期.

20) ‘empowered democracy’는 Roberto Unger의 개념이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로베르토 M. 옹거, 『정치: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창비, 2015 참조.

21)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엮음 『근대한국 개혁사상을 실천하다』, 모시는사람들 2019, 5면.

좀더 깊이 들여다보자. 개혁은 선천개혁과 후천개혁으로 구별되는데, 동학(과 천도교)의 후천 개혁은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고, 그 저변에는 온우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정신(敬物)이 있다. 그래서 동학의 후천개혁은 “생명의 개혁”(29면)으로서 “민중 스스로 지속적인 정신수양과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주체적으로 열어 밝히는 대변혁의 과정” 즉 “창조적 근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3면) 또한 유학적인 윤리 질서의 도덕 개념이 생명평화의 도덕개념으로의 대전환한 것이고, 하늘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했기에 (초대 교주인 崔濟愚의 용어로 말하면) ‘개혁적 삶’이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생태적 삶, 생명평화의 삶’이다.(64면) 적어도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 근현대 사상사에서 종교의 변혁적 역할이 유독 강조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런 해석은 역사 새로 쓰기에 기여한다.

이를 대할 때 익숙한 ‘다원적 근대성’ 패러다임에 속하겠지 짐작하기 쉽다. 사실 이 시각이 기본적으로 공유된다. 그런데 발표자가 보기에 단지 ‘토착적 근대’ 또는 ‘한국적 근대’라기보다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를 동시 수행한 것으로 봐야 더 적절할 듯싶다.²³⁾ 얼핏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려니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한국 근대 신종교가 단순한 문명개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근대에 대한 수용 또는 저항을 적절히 선택하면서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개혁종교’였던 점만 봐도 그렇지 아니한가. 또한 물질개혁에 상응하는 정신개혁을 중시한 원불교의 개교 표어야말로 ‘이중과제’를 간결하게 압축한다.

이렇게 개혁을 다시 읽을 때, 신종교에 속하는 원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다. 원불교에 이르러 (후천)개혁사상과 불교가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근대 과학문명과 기독교문명이 적극 수용되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여기서 원불교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해(1945년) 주창한 건국론을 새롭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사실 정교일치의 문명관은 개혁종교에 공통된 특징이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를 (정교일치나 정교분리가 아니라) 두 개 바퀴로 비유한 원불교의 정교동심(政教同心)에 대한 인식은 이채롭다. 이 시각에서 보면, 세가지 치교(治教, 다스리고 교화함)의 병진사상—곧 덕치(德治)와 정치(政治)에 덧붙여 도치(道治)까지 아울러 행해져야 원만한 세상이 된다는 인식—의 사상적 깊이와 현재적 의미가 제대로 부각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종교, 곧 개혁종교를 생태·평화사상의 실천으로 다시 읽는다든가, 정교일치에 대한 재해석은 대안적 문명론에 대한 발본적 사유를 촉발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그 해석이 바탕을 두고 있는 ‘다원적이며 토착적인 근대성의 패러다임’은 이미 한국 안팎의 논자들에 의해 종종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그중 별도의 근대성을 구상하는 일이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너무 쉬운 해결책으로 단순화된 나머지 근대극복에서 핵심 난관인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커다란 공백’을 남겼다는 지적은 핵심을 찌른 것이다.²⁴⁾ 근대성을 우리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는 주된 이유가 역사적 근대인 자본주의 시대가 우리 삶에 발휘하는 압도적인 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2)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엮음 『근대한국 개혁운동을 다시 읽다』, 모시는사람들 2020. 이하 서술에서 직접 인용의 경우만 본문에 면수를 표시했다.

23) 이중과제론에 대해서는 이남주편, 『이중과제론』, 창비, 2009 참조.

24) 황정아 「‘개혁’이라는 대담한 호명」, 『창작과비평』, 2019년 봄호

5. 결론을 대신하여

또다시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명의 조건을 동아시아인이 창발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100년의 변혁 기간에 중국과 한국에서 문명담론을 활용한 양상을 개인수양과 사회개혁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감에 기반하여 양자의 병진을 추구한 문명담론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변혁(혁명)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체감된 팬데믹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뜨거운 쟁점이다. 개인과 국가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국가 비판이라는 상투적 담론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탈정치적 협력도 아닌, 국가 개입 자체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통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사유가 절실한 시점이다.²⁵⁾ 이 발표에서 개인수양과 사회개혁의 병진(의 재할성화)을 앞으로의 대안적 문명담론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발표자는 양국에서 모색중인 대안적 문명이 보편적 문명론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참고가 될 만한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위에서 소개한 세가지 치교를 병진하는 길이다. 즉 덕치, 정치(政治)와 더불어 ‘도치(道治)’까지 아울러야 한다.

“‘정’에 의한 다스림이란 동서양의 각종 현실정치 및 법치에 해당하는 셈이고 ‘덕’에 의한 다스림은 유가적 예도정치의 주된 수단인 지도자의 덕치를 뜻하는 반면, ‘도치’는 민중 각자가 도인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만한 세상을 이룬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정치와 덕치를 함께 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유가의 현실주의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유교의 예치는 결국 군주 또는 목민자의 덕치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기에 민주적 대등관계의 개념과 거리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바로 여기에서 불교의 발상이 긴요해진다. 장즈창(張志强)은 양명학의 근대적 형태인 근대적 유식학(唯識學)을 분석하여, 개인의 전의(轉依)로 철저한 개인혁명을 이루는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혁명을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정불국토(淨佛國土)라는 의미에서의 철저한 사회개조에 도달하는 장기과정에 대한 인식의 흐름이 중국 문명의 선명한 빛깔을 구성해 왔음을 보여준다.²⁶⁾ 더 나아가 백낙청(白樂晴)은 원불교의 교리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도치가 민중 개개인 각자가 도인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원만한 세상을 이룬다는 새 개념임을 강조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직껏 국가 단위로 시행된 바 없다고 봐야 할 도치는 물론이고 정치와 덕치도 현대세계에서는 세가지 치교의 결합 없이는 성립하기 힘들다는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세가지 도’의 원만한 동시수행도 각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 가는 모험을 감당해야 한다.²⁷⁾

중국에서도 이 모험을 떠안으려는 기미가 엿보인다. 원테전(溫鐵軍)이 자본의 과잉축적과 공

25) 황정아,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모델」, 『창작과비평』, 2020년 가을호.

26) 張志强, 「革命與佛學」, 『開放時代』 2018年 第1期, 37면.

27) 이상은 백낙청, 『서양의 개혁사상가 D. H. 로런스』 창비, 2020, 484-485면. 이 글은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鼎山) 송규(宋奎, 1900-1962)가 제시한 세 가지 치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간적 확장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해, “그 자체로는 영혼이 없다. 한층 깊고 두터운 사회정의의 사상과 문화적 내용으로 그것을 채워가야 한다.”고 논평한 것은 하나의 사례이지 싶다.²⁸⁾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명론으로의 전환이라는 가치지향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한 연구 소재가 아니기에 매력적이지만 그 함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협동적으로 연구하되 (개벽의 뜻에 걸맞은) 개인수양과 사회개혁을 동시 병진하는 마음이 짐까지 아우르지 않으면 공허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실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벅찬 일감이다. 그러나 큰 일을 지향하면서 차근차근 작은 일을 할 때(以小成大) 작은 일이 훨씬 더 실행력을 갖는다지 않던가.

28) 원테진·황더싱, 「중국의 ‘일대일로’는 평화발전의 이념인가」, 『창작과비평』, 2015년 가을호, 98면.